

데스크 시각

눈물과 포옹, 소통의 정치를 위하여



송기동 문화2부장

“...철없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보지 못한 이제, 당신보다 더 큰 아기가 되고 나서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의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지난 18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장. 유가족 김소송(37) 씨가 ‘슬픈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를 추모하는 편지글을 낭독하다 울먹거렸다. 완도수협에서 근무하던 소형 씨의 아버지는 1980년 5월18일에 태어난 딸을 보기 위해 완도에서 광주로 올라왔다. 나흘 뒤

인 22일 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친척집에서 아내와 갓난 딸과 머물던 그는 계엄군이 합포로 쏜 M16 총탄에 맞아(하악골 맹관 총상) 29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김 씨의 편지글을 듣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 다음 이어진 장면은 예상 밖이었다. 남북을 마치고 퇴장하는 김 씨를 따라잡은 문 대통령이 꼭 안아 주면서 위로하는 모습은 더욱 눈물샘을 자극했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이나 TV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 모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종률 작곡가와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9년 만에 다시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래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노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노래로 들렸다.

유가족 안아 주는 대통령

격식 없는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행보가 화제다. 기념식을 마치고 나오며 구급차에 먼저 길을 양보하고, 동구 대인동 5·18 유공자 식당에서 8000원짜리 ‘생비’(육회 비빔밥)로 점심을 한 모습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같은 날 유튜브에 올라온 문 대통령 동영상도 눈길을 끌었다. ‘뺏어진 구두 신고 목록’이 튀어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5분28초짜리 동영상이다. 벌써 150만여 명이 조회한 이 영상에는 지난해 5월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문 대통령 후보의 닳고 찢어진 구두가 나온다. 분향을 하며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자연스레 구두 밑바닥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구두를 오래 신은 까닭에 밑바닥은 닳아 있고 심지어 오른쪽 구두 밑창은 갈라져 있다. 게다가 이 구두는 유명 상품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네티즌들이 그가 유명 브랜드 양말을 신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양말은 남대문시장에서 2만 원에 8켤레, 게다가 한 켤레를 더 얹어 주는 ‘짜뎀 양말’이었다. 이러한 검소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의 가치 있는 면모는 이전 대통령과 너무 달라 보여 낯설기조차 하다. 남의 입에 오르는 구설수(口舌數)가 아니라 탈근위적이면서 소탈한 모습이기도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어제는 여러 가지 일로 대통령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4일 만인 이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너무 다른 운명이 오버랩됐다. 서울 구치소를 떠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날날이 TV로 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시작했지만 국정 농단으로 ‘현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자전거에 막걸리 병 신고

문 대통령은 격식 없는, 소탈한 행보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 앞에는 경제 문제와 남북한 관계, 5·18 진상 규명 등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보여줬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눈물과 포옹의 정치를 계속해서 보여 주기를 바란다. 196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꿈꿀 때, 한 시인이 그린 이상적 대통령 모습은 이랬다. “...하늘로 가는 길이면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공무리에 막걸리 병을 신고 삼삼 리 사골길 시인의 집을 가터란다.”(신동엽, ‘산문시 1’중에서)

은편칼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박근혜 탄핵에 이어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촛불혁명의 다음 과제는 국정 전반의 대대적 개혁과 개헌이다. 국민과 정치권은 개헌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요소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등 많은 부분에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 사회의 이정표를 세우고 국가 경영의 기본 틀을 짜야 촛불혁명이 완료된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개헌 못지않게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고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시대

개헌과 선거법 개정, 빅딜이 필요하다

정신이고, 승자 독식주의 및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 모두에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그의 언행으로 보아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은 믿어오 될 것 같다.

개헌논의에서 합의를 보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는 권력구조 분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4년 중임제, 3권분립 강화를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등을 약속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내용이다. 반면 야당 국회의원 다수는 권력분점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방식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 정파들의 쟁점은 개헌보다 훨씬 복잡하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중 내지 반대이다. 정당별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을 놓고 보면 신중 내지 반대자가 더 많

다. 선거법 개정이 선거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통 큰 빅딜(big deal)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 모두 어렵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서 순수 대통령제나 권력분점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야권은 미국식 대통령제 플러스 책임총리제를 수용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의 발효시기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로 앞당기는 방향에서 타협을 이루면 좋겠다. 헌법 부칙에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보장하되, 2020년 이후 대통령직은 개정된 헌법의 내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된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선거법 개정에서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한 가지씩 양보하면 국민은 두 가지 모두를 취할 수 있다. 그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 다수는 양원제에 대해서 소극적 내지 반대이다. 상원

을 설치할 경우 (하원) 선거구 및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 들 것을 걱정해서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 내지 신중할 것도 비례대표의 증가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를 걱정해서이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는 OECD 평균치에 못 미친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성사를 위해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목소리를 터주어야 한다.

속담에 ‘하늘을 보아야 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개헌이 성사되어야 헌법 전문에 5.18정신도 들어가고 기본권도 강화하며 지방분권형 헌법도 만들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최적기이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과 정치권이 통 큰 빅딜을 행하여 한국 정치 발전의 대 전환점을 만들어보자.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유두석 장성군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깜짝 놀란 민중 통제자료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 수검자 유행률 자료를 분석했더니 20·30대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인 129만 3562명이 1차 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됐다는 것이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이 중장년층 이상인 노인층에서 주로 걸린다는 편견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장성군이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지하려는 이유로 이 같은 한국의 현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장성군은 민선 4기 시절인 2007년 전남대병원과 손잡고 국립심혈관센터를 장성에 건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명의 정명호, 국립심혈관센터 그리고 장성군

그렇다면 장성군은 왜 대한민국에서 전남, 그리고 장성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10년 동안 정부를 설득해 온 것일까. 우선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건립은 호남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오송(충청권)과 대구(경상권)의 첨단 의료복합단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호남에도 의료 연구 클러스터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특히 최적으로 꼽히는 장성 남면 나노산업단지는 광주 인형전지 대다 전남과 전북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등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이 위치한 광주연구개발 특구에 포함돼 있어 첨단의료기술 및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뿐만아, 축령산 편백림을 활용한 재활치료 요양 인프라까지를 고려하면 장성을 건립지로 삼아야 할 이유는 보다 명백해진다.

어느덧 한국인에게 ‘재양’이 된 미세먼지 폭탄도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과 폐암은 물론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뇌심혈관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립심혈관센터가 장성에 건립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순환기 내과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정명호 교수의 존재감 때문이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위원이자 실무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세계 최고의 심근경색증 분야의 권위자다.

한국심혈관스탠드연구소 센터장이기도 한 그는 특히 국내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자 치료를 위해 연간 3000여건 이상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해 국내 최대 시술 실적과 함께 99%의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지난 2005년 대한순환기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연구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등록 연구를 전국 50개 대학병원 대표로 수행해, 현재까지 6만1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총 176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회지에 보고하는 등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명의인 정 교수가 우리 지역에 있었기에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계획도 현실화됐다는 데 의미를 제기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 교수는 지금도 국립심혈관센터 유지에 몰심양면으로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명의’ 정명호 교수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적·인적적 타당성 등을 높게 평가했으며, 이번 19대 대통령 광우·전남 3대 상상공약 중 하나로 국립심혈관 센터를 설립하고 심혈관 연구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장성의 ‘10년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번 대선과정에서 소규모 자치단체인 장성군의 목소리까지 경청해주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거쳐 공약으로 반영하는 등 작고 낮은 곳을 먼저 살피려는 세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성 국립심혈관센터의 빠른 설립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높다.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저는 제 말에 대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선거 때 내건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새로운 정권 초기 지역의 밝은 미래가 걸린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설립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지역민의 많은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社說

노무현의 꿈과 문재인인의 약속이 이뤄지길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닌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강조하며 그 누구보다 각별한 신뢰를 보낸 바 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 대통령으로서, 이날 추도식이 하늘에 있는 노 전 대통령에게 제3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노무현’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에 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이라며 지난날을 회고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꿈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에 대해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

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후 전개된 현실은 만만치 않다. 촛불로 탄핵과 조기 대선을 가져온 국민의 기대치는 높고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과반에도 훨씬 못 미쳐 개혁의 동력은 부족하다. 여기에 민생 경제, 안보·외교 위기, 적폐 청산 과제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국민 통합의 힘을 간고로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하고 봉하마을을 다시 찾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낮은 자세, 소리없는 헌신, 치열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5·18 행불자 자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행방불명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국가유공자로 확정돼 국립5·18민주묘지 묘비번호까지 부여받았지만 묘비 주인의 명단이 빠지거나 심지어 행불자의 이름이 잘못 새겨진 묘비가 세워져 있는 실정이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인정한 5·18 희생 행불자는 총 75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 요청으로 5·18묘지 행불자 묘역에 묘비가 세워진 이는 67명이다. 나머지 7명은 행불자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묘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광주시와 5·18묘지관리소가 가지고 있는 행불자 명단이 다른 것이다. 실제 행불자 윤명희 씨는 묘지번호 ‘10·67번’으로 행불자 묘역에 비석이 마련돼 있다. 윤 씨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지만 정작 광주시 행불자 자료에는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관계자는 “시 자료에 윤 씨 명단이 있는데 다른 직원이 잘못된 자료를 보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불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5·18 묘지에는 행불자 이름이 잘못 새겨진 묘비도 있다니 더욱 그렇다.

5·18은 아직 미완의 역사다. 최초 발표 명령을 내린 이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37년이 지났지만 5·18 관련 사망자 수와 압매장은 속세로 남아 있다. 압매장과 행불자 간의 어떤 관련성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5·18 행방불명자의 명단과 행적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도 기관마다 제각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젠가는 밝혀져야 할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행불자에 대한 잘못된 자료를 바로잡고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23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됐다. 18세기 후반 미국에선 연방정부 공직자들의 임명권을 놓고 대통령과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 간에 줄다리기가 한창이었다. 결국 1787년 제헌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인준권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차안을 채택한 것이 인사 청문회의 출발이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 6월 국무총리 재임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03년 1월 인사 청문 대상자에 국

인사 청문회

정보위원·감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직이 포함됐고 2006년 2월에는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로 확대됐다. 인사 청문회는 정책 능력보다 사생활 검증에 치우쳐 가혹하다는 평가를 종종 받았다. 수많은 전국구 스타들이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해 명성을 잃었다. 병역 비리·위장 전입·논문 표절·세금 탈루·부동산 투기 등이 스타들의 발목을 잡는 5대 족쇄였다. 김대중 정부에선 장관 이하여대 총장

이 위장 전입 문제로 낙마했고 이명박 정부 때 40대 총리 후보로 주목받던 김태호 경남지사가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안대희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으로,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역사관 논란으로 잇따라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부총리로 지명됐다 논문 표절로 중도하차한 김병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돼 두 번이나 눈물을 삼켰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용섭 장관은 한 번도 힘들다는 청문회를 세 차례나 통과해 화제가 됐다. 김 총리는 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대법관·감사위원장·국무총리’를 연거푸 통과해 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 장관은 세 번의 청문회를 통과해 호남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해 호남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